

민주 “2월 내 특별법 처리”… 빨라지는 통합 시계

민주, 당내 특위 설치 공식화…혁신당, 전폭적 입법 지원 선언
법 통과면 3월부터 준비단 가동…6월 지선 전 통합 기틀 마련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대통합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당내 특별위원회 설치를 공식화하고 2월 임시국회 내 특별법 처리를 약속한 데 이어, 조국혁신당 역시 통합을 ‘생존을 위한 필수 과제’로 규정하고 전폭적인 입법 지원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범여권도 통합 특별법 제정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오는 6월 지방선거 전 통합의 기틀을 마련하려는 움직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11일 지역 정가에 따르면 정경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9일 경남 거제시의 한 굴 양식장 체험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광주·전남 통합 행정 추진에 대한 강력한 지원 의사를 밝혔다.

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호남권 의원들이 통합 추진에 깊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공언했다.

정 대표는 특히 통합 논의를 구체화할 당내 기구 구성과 관련해 “이제는 실행에 옮겨야 할 시점”이라며 당 차원의 특별위원회 설치 계획을 알렸다.

그는 “특위에는 국회 관련 상임위원회 간사들이 모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단순한 논의의 기구를 넘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등 실무 핵심 라인을 특위에 배치해 법안 심사과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정 대표는 또 지난 8월 당선 직후 발족시킨 호남 특위를 언급하며 “충남과 대전의 통합 논의가 이제 막 시작된 것과 달리,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미 호남특위라는 기반이 갖춰져 있어 통합 작업에 더욱 탄력이 붙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민주당이 여당으로서 당론 차원의 드라이브를 걸 경우,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의 2월 국회 문턱 넘기가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당 특위가 가동되면 정부 부처와의 이견 조율은 물론, 통합 지방정부에 부여할 재정 특례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행정 체계 개편 등 민감한 쟁점들을 일괄 타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이는 법

안 심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모적인 정쟁을 줄이고 입법 효율성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국혁신당의 지원 사격도 통합 동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조국 대표는 지난 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행정 통합은 단순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지역 소멸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문제”라고 규정했다.

조 대표는 “서울특별시와 버금가는 과감한 조직·재정 특례를 확보하고, 지방교부세의 추가 배분과 공공기관의 우선 이전이 법적으로 보장되도록 당의 모든 정책 역량을 쏟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2026년을 ‘광주·전남 대통합의 원년’으로 삼아야 한다며, 수도권 일극 체제를 타파하고 전국 곳곳에 다양한 기능의 수도가 들어서는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조국혁신당 사·도당 차원에서도 정부와 지자체에 ‘초당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이재명 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에 힘을 싣고 있다.

진보당 광주시장 역시 지난 8일 국회 회견을 통해 단순한 행정 결합을 넘어선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을 촉구했다. 진보당은 자치 입법·재정·조직권을 완벽히 보장하는 ‘지방정부’로 위상 강화를 요구하며 2026년 지방선거와 연계한 개헌 논의를 제안했다.

국민의힘 광주시장도 앞서 신년사 자료를 통해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와 관련, 지방선거 이전에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해야 한다며 공개적으로 힘을 실었다.

지역 여론 결집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민주당 전남도당은 오는 11일 오전 무안군 삼향읍 도청프라자에서 ‘전남·광주 통합 결의대회’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의 필요성과 추진 방향을 공유할 계획이다. 전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결의대회를 통해 지역민의 목소리를 당 논의에 적극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2월 특별법 국회 통과가 현실화되면, 3월부터 ‘광주·전남 통합지방정부 출범 준비단’이 가동되면서 사실상 통합 실행 단계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11일 오전 광주시 북구 전남대학교 컨벤션홀에서 열린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에서 민행배·신정훈 국회의원, 이병훈 민주당 호남발전특위 수석 부위원장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등 참석자들이 통합 성공을 다짐하고 있다. <민행배 의원실 제공>

‘통합 결정권’ 시·도의회에 쏠리는 눈

광주시의회 “법적 장치 필요” 입장문…전남도의회, 이번주 의총

광주·전남 행정통합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 방식이 사실상 시·도의회 의견 청취로 가닥 나면서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에 관심이 쏠린다.

광주·전남 행정통합은 양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못한다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앞서 전남도의회는 부족한 주민 공감대 등을 이유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광주·전남 행정대통합을 두고서는 양 시·도의회가 적극적인 협력에 나설 것이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0일 성명서를 내고 “광주·전남 행정통합 추진 과정에서 시민의 목소리가 ‘속도’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진영에서 행정통합에 대한 무리한 속도전을 우려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 의견 수렴 과정을 강조한 듯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시의회는 이어 “통합에서 광주의 정체성과 이익은 확실히 지켜져야 한다”며 “정부의 책임과 지원을 전제로 통합 과정에서 광주시가 재정적 불이익이나 행정적 위상이 악화되는 일이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된다. 이를 보장 할 법적·제도적 장치가 명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광주시의회 성명서와 관련, 양 시·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행정통합에 대해 대의기구인 의회가 내놓은 형식적인 입장문이라는 데 무게가 실린다. 당장 광주시의회는 지난 8일 행정통합 광주시의회 대응 태스크포스(TF) 꾸리는 등 행정통합에 적극 협조하는 모양새다.

전남도의회는 광역연합 때와는 다를 것으로 전망된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12일 오전

상무위원회의를 열고 ‘광주·전남 통합 추진’에 대한 당론 의결에 나선다.

상무위원회는 ‘전남·광주 통합에 대한 적극 찬성’, ‘도의회·시의회 의결 존중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을 결의문 안건으로 채택했다. 전남도의회 의원 60명 중 민주당 소속인 56명이 전원이 상무위원회 위원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당론 의결로 전남도의회 입장 역시 행정통합 찬성으로 결론나는 것이냐는 분석이 나온다.

무엇보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내 영향력이 절대적인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통합 지지 입장과 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국회의원들의 행정통합 찬성 입장이 도의원들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민주당 전남도당 의견과는 무관하게 전남도의회는 12일 혹은 13일 열린 김영록 도지사의 설명회 이후 빠른 시일 내에 의원 총회를 열어 도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도선인 기자 sunin@kwangju.co.kr

이 대통령 전폭 지원 약속에 지역 사회 공론화 확산

정치권·학계, 속도전 주문…시민단체, 내일 시의회서 타운홀 미팅

이재명 대통령이 광주·전남 행정통합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하자 지역 사회가 통합의 당위성과 실행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정치권과 학계는 지금을 통합의 ‘골든타임’으로 규정하고 속도전을 주문하는 한편, 시민단체들은 주민 직접 참여를 통한 절차적 정당성 확보에 나서는 등 통합 논의가 다각도로 확산하고 있다.

가칭 ‘광주전남통합추진 시민포럼(준)’과 민행배(광주 광산읍)·이개호(담양·함평·영광·장성)·신정훈(나주·화순)·주철현(여수·갑) 국회의원, 이병훈 호남발전특위 수석부위원장은 11일 오전 전남대 광주캠퍼스 컨벤션홀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민대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9일 청와대 회동 이후 처음 열린 대규모 공론장으로, 통합 논의가 ‘관(官)’ 주

도를 넘어 ‘민(民)’과 ‘정(政)’으로 확대되는 신호탄이 됐다는 평가다.

기조발언에 나선 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는 “수도권 일극 체제라는 거대한 파고 앞에서 광주와 전남이 살아남을 길은 통합을 통한 ‘초광역 경제권 구축’”이라며 생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선택임을 강조했다.

토론의 핵심 화두는 ‘재정 분권’과 ‘실행 속도’였다. 최영태 전남대 명예교수는 “정부가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때가 바로 통합의 적기”라며 “독일의 ‘보

충성 원리’처럼 취약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재정지원을 담보하는 조항을 특별법에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영철 전남대 명예교수 역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같은 확실한 인센티브의 법적 권리를 역설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행배 의원은 “검찰 개혁 당시처럼 특별법으로 큰 틀의 통합 구조를 먼저 세우고 세부 내용을 채워가는 방식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신정훈 의원과 이병훈 위원장도 “이번 기회를 놓치면 통합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전날가 중심의 토론회에 이어 시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는 자리도 마련된다. ‘새로운광주포럼’은 13일 오전 9시 광주시의회

1층 로비에서 ‘광주·전남 행정통합, 시도민과 함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제1회 타운홀 미팅을 연다.

이날 행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문인 북구청장, 최형식 전 담양군수 등이 참석해 통합이 시민의 삶, 교육, 복지에 미칠 영향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한다. 포럼 측은 이날 도출된 시민 의견을 담은 합의문을 작성해 정부와 국회, 양 시·도에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홍인화 새로운광주포럼 대표는 “중요한 것은 속도보다 시민이 체감하는 완성도”라며 “이번 타운홀 미팅이 불필요한 갈등을 넘어 실행 방향을 정교하게 다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hb@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겨울철 일등보양식

청자골 자라양식장 창업 20주년 특별할인

고단백, 면역력 최고!

자라 엑기스 2개월분

① (12kg + 한약재)
② (12kg + 마늘 생강 대추)

70만원 → 60만원 (10만원 할인)

자라 요리 전문(단체모임환영)
자라탕 용통탕 / 방생자라 판매

청자골 자라 양식장 | 061-434-0067 / 010-3635-3362
강진군 성전면 별미로 297-52